

9월 금융개혁 기자간담회 참고자료

◇ 금융개혁의 추진현황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 청취를 위해 「기자 간담회」 개최 → 매월 초 정례화 예정

I. 금융개혁의 비전과 슬로건

□ 금융개혁을 통해 지향하는 비전은 3가지

- ❶ 국민의 재산을 (안정적이면서 효율적으로) 키워나가고
- ❷ 기업과 가계에는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며
- ❸ 청년이 원하는 (선망의) 일자리를 만드는 것임

□ 비전 달성의 중간목표이자 주요 동력은 금융업의 경쟁력 강화

- 금융개혁은 국민을 직접적인 정책 대상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와 시장을 향한 제도 개선과 규제 완화가 이루어진 다음 그 성과가 국민에게 제공되는 구조

→ 금융업이 (i) 자금중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(ii) 혁신적 서비스 등 스스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해야 국민경제에 기여

❶ 금융권의 자율성·창의성, 역량제고 필요 (자율책임문화)

- 금융권을 위 아래서 옥죄고 있는 「감독과 규제」 개혁이 시급
 - (i) 코치, 과도한 검사·제재 등 감독관행 → 심판, 컨설팅 검사로
 - (ii) 경쟁과 융합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 → 과감히 폐지·개선

❷ 저금리·고령화·IT와 융합 등 금융환경 급변은 위기이자 기회

- 판에 박힌 영업행태로는 생존 곤란 → 경쟁 속 변화 선도 필요
- 협업·융합과제의 해결 및 금융의 외연확대 → 성장동력 창출

➔ 이런 맥락에서 금융개혁의 슬로건을
“글로벌 경쟁력, 이제 금융의 차례입니다”로 선정

II. 8월의 금융개혁 : 5건의 개혁방안 확정 및 부처협업과제 논의

① 은행의 자율성·책임성 제고방안(제8차 개혁회의, 8.13)

- 금리, 수수료 등 가격 변수를 시장에서 자율 결정
- 금융회사 스스로 내부통제 강화 → 금융사고 방지 및 시장질서 유지
- ➔ 감독당국이 시장기능을 존중하고 내부통제 중심으로 금융 감독의 큰 틀을 전환하여 금융권내 자율책임문화 확산

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SA) 도입(제8차 개혁회의, 8.13)

- 예·적금,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택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상품 도입
- 계좌 내 발생하는 이익·손실간 통산 후 순이익에 세제혜택
 - * 순이익 200만원까지 비과세, 2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(지방소득세 포함 9.9%) → 9월중 관련 세법 개정안을 국회제출 예정

➔ 저금리 시대에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국민의 재산형성을 지원 하고 편입 상품의 벽을 허물어 상품간·업권간 경쟁 촉진

③ 보험상품 판매채널 개선 추진방안(제9차 개혁회의, 8.27)

- 업계의 자정노력(자율규제) →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강화 → 보험 판매채널 인프라의 종합정비 순으로 단계적으로 정비
 - * (1st) 자율규제 : 표준위탁계약서 도입(수수료 기준, 부당 스카웃방지 등)
 - (2nd) 규제강화 :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보험대리점의 부당 요구 금지 및 처벌
 - (3rd) 보험 판매채널 인프라 정비 : 9월중 TF 구성 및 종합 검토 진행

➔ 불공정·부당 행위 방지 등 보험업계 스스로의 자율책임을 강화하면서 소비자 보호 및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

④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(제9차, 8.27) ※ 금일 11시 브리핑 예정

- 직원에 대한 제재는 금융회사 자율제재를 원칙으로 하고 기관 및 금전제재는 확대·강화[인적제재 → 기관 및 금전제재로 전환]
- ➡ 직원 개인에게 건전이 책임을 묻는 관행 등 금융권을 옥죄는 당국의 제재 행태를 쇄신하여 금융권에 만연한 보신주의 타파

⑤ 예보 공동검사 관행 개선방안(제9차, 8.27) ※ 전일 보도자료 배포

- 공동검사로 인한 중복 검사 및 금융회사의 과도한 수검부담 등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보의 검사방식 쇄신
- ➡ 금융권의 적극적창의적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4월 발표한 검사 개혁방안의 후속조치[→ 한은과도 공동검사 개선을 협의할 계획]

⑥ 세제·연금 등 부처협업과제 논의(제3차 금융개혁추진단회의, 8.25)

- 국민의 노후 안전판 강화 및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연금 및 금융 세제 개선방안에 대해 관계부처간 협업중으로 조속 마무리
- ➡ 관계부처 협의가 완료되면 즉시 개혁회의 상정·발표 추진

Ⅲ. 9월의 금융개혁 추진과제

① (민간 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, 10차, 9.10일) 지역·서민 중심으로 역할을 명확히 하고 영업 규제의 합리적 정비 추진

* 보험, 금융투자업 등의 경쟁력 강화방안도 10월 초까지 확정·발표 예정

② (그림자규제 개선방안, 10차, 9.10일) 내·외부 통제 강화를 통해 일관성 없는 지도 방지 및 당국지도의 투명성·합리성 제고

* 금융규제개혁 후속 일정(안)
· 10월(건전성 규제) → 11월(영업행위 규제) → 12월(시장질서·소비자보호 규제)

③ (금융교육 강화방안, 11차, 9.25일) 금융교육 실태조사 등을 바탕으로 금융소비자 맞춤형 교육*, 추진기구 정비 등을 추진

* 금융상품, 자기책임에 따른 투자, 미래 설계 등 포함

④ (금융상품자산문업 활성화, 11차, 9.25일 목표) 규율체계를 확립하고 복합점포, 온라인 채널 및 ISA와 연계 → 소비자 선택권 확대

⑤ (연금제도 개선방안, 11차, 9.25일 목표) 국민의 노후 대비 및 금융 산업 동반 성장을 위한 연금자산의 효율적 운용방안 마련

Ⅳ. 「현장 중심 원칙」 강화 및 「위/원간 역할분담」 견지

① 현장점검반 방문대상 확대 및 의견접수 채널의 다양화 추진

* 15.4.2일 최초 현장방문 이후 197개사 방문, 2,400건 건의 접수
→ 현장답변 등을 제외한 회신대상 1,436건 회신 완료(수용률 46%)

○ 현장점검 대상 : 금융회사 → 금융이용자*로 확대

* 금융소비자, 중소벤처기업, 핀테크 사업자, VAN 사 및 가맹점

○ 상시 접수 온라인 시스템 및 위원장/원장 직보 건의채널 마련

② 공청회·토론회 등을 통한 적극적 의견수렴과 현장방문 확대

○ 9월말 ~ 10월초 영업범위 조정을 포함한 경쟁력 강화·규제 개혁 등에 대한 업권별 토론회 개최 예정

○ 핀테크 1박2일(9.10~11일), 서민금융 유관기관 방문(9.23), 기술 금융 이용기업 방문(9.24)등 개혁과제와 연계된 현장방문 지속

③ 현장을 잘 아는 유능한 파트너인 감독원이 금융개혁의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 마련 지속

○ 감독원이 잘할 수 있는 부문*에 대해서는 감독원이 권한을 갖고 책임지고 업무를 수행 → 금융회사의 중복 부담 최소화

* (7월) 위/원 협력강화방안 : 인허가 승인 심사시 감독원의 주도적 역할 수행 등
(8월) 제재개혁방안 : 제재에 대한 금융위/원의 권한과 책임 명확화
(9월) 그림자규제 개선방안 : 금융위의 통제보다는 감독원의 내부통제 및 외부 전문가의 평가 강화에 초점

V.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입장

① 금융회사와 달리 국민들의 경우 금융개혁 체감도가 낮음

- i) 금융회사를 거쳐 시행되므로 금융회사 변화가 선행되어야 하고
ii) 법률 개정 소요시간 등으로 대국민 체감도 제고에 시간 필요
- ➔ 금융회사의 변화 독려 및 신속한 입법과 함께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과제*를 하반기에 중점 추진하여 국민 체감도 제고
- *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SA), 클라우드 펀딩, 국민체감 20대 개혁 과제 등

②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없이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독점가격이 형성되므로 금리, 수수료에 대한 당국의 수수방관은 곤란

- 가격통제는 금융권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억누르는 대표사례
→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반드시 논의·개선되어야 할 사안
- 가격은 경쟁 수준, 서비스의 차별성 및 고객수요 등에 의해 결정되므로 가격 자율화가 가격 인상으로 직결되는 것이 아님
- ➔ 경쟁 촉진*, 공시개선** 등을 통해 시장의 가격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
- * 계좌 이동제, 인터넷전문은행, ISA 도입 등
- ** 여러 금융상품을 한눈에 비교하는 비교공시시스템 구축·운영
- 다만, 건전성, 소비자 보호 및 서민층 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극히 예외적 경우에는 공식절차* 준수를 전제로 지도
- * 행정지도 운영규칙에 따라 행정지도를 실시할 경우 의견청취(20일 이상 원칙)를 거쳐 금융위 사전보고하고 금융규제포털에 등록

③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P2P 투자(클라우드 펀딩)의 근거가 마련된 것처럼 P2P 대출에 대한 제도 정비 필요

- ➔ 연내 공청회 등 폭넓은 의견 수렴 진행

VI. 9월중 주요 금융현안

① [가계부채] 8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전월 대비 큰 변화 없음 [→ 주택금융공사 양도분을 고려시 7월 대출 수준과 유사 예상]

* 은행권 주택대 증감(조원) : (5월)6.3 (6월)6.8 (7월)6.4 (8.25일)5.0
양도분 제외시 : (5월)0.6 (6월)△12 (7월)0.2 (8.25일)4.6

- ➔ '가계부채 상시점검반'을 통해 은행권 대출 동향을 집중 점검하고, 가계부채 대책 후속조치 추진에 만전

② [대우조선해양 실사] 산은은 7.21일부터 대우조선 손실의 원인을 규명하고, 경영실태 및 전망 분석을 위해 실사중(9월말 완료예정)

- ➔ 실사결과를 바탕으로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(산은)

③ [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] 시장 중심의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 설립 추진중

- ➔ 9.11일 공청회 등을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10월말 출범을 목표로 준비

④ [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] 9.30일부터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를 위한 신청 접수 절차를 진행

- ➔ 신청접수(9.30~10.1) 및 예비인가(12월중)를 거쳐 16년 상반기 본인가

⑤ [정책금융 역할 강화] 창·혁신적인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「기업 생애주기별 정책금융 역할 강화방안」을 마련 중

- ➔ 9월말 공청회 등을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, 10월 중 금융 개혁 회의를 통해 발표 예정